

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7. 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7월 6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2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既송부한 자료로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90호 『금융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년 3분기 중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안건(22건) 중 비공개 기간연장이 필요한 안건(19건)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91호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들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

- (위원)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 등이 제한됨. 자본충실을 기하고 문어발식 다각화를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이유가 있다 보니 훨씬 고강도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경우 어떤 고강도의 규제가 있는지 알고 싶음. 또 하나는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일 것’이 요건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음. 비주력 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에서 다우키움이 경계에 딱 걸려있던데, 3조 원은 왜 안 되는 것인지? 다우키움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취지가, 비록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 위기를 야기할 조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이라면, 예를 들면 특정업체를 딱 지정하면 안 되겠지만 ●● 같은 경우 3조 원 이상인데,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3조 원 정도로 낮출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음.

- (보고자) 우선,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내부통제·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자기자본도 개별기업으로서는 이미 규제가 있는데 금융그룹으로서도 자본규제를 받게 됨. 그리고 매년 추가위험평가를 해서 추가위험자본을 쌓는 부분이 있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 여러 가지 위험관리실태나 자기자본 평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규제함. 두 번째 질문하신 비주력 업종 5조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 개정 이전에도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음. EU규정에 우리의 기준으로 8조 원 이상, 2종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자산총액 수준을 너무 낮출 경우, 감독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도 있어, 실질적으로 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5조 원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당시 실질 규모를 해본 결과 6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운영을 해 오다가 법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위원님께서 “3조 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며,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음.
- (위원) 기업집단을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연결자기자본 규제 같이 고강도의 규제를 하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진행될 경우 좀 더 고강도의 자기자본 규제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것 같음. 내부거래도 제한하고 그러는 이유가 자본의 공백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도모해서 시스템 위기가 조금이라도 방아쇠로써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면 3조 원까지 한다고 해서 대상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

니고 약간 면밀하게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기준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임.

- (보고자) 금융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음.
- (위원) 소위 때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히려 5조 원 이하의 기업들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위에서 금감원과 같이 검토해보면 좋겠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금융회사 중에 금융위원회에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는지?
- (보고자) 예를 들면 대부업체들은 일정 요건이 되면 금융위에 등록하는데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음.
- (위원) 그러면 대부업체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는지?
- (보고자)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서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회사 말고도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업체라든가 그런 것도 정의상 금융회사로 포함이 됨.
- (위원) 금융위에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었음.
- (위원) 두 분 위원님께 5조 원 기준으로 잡은 이유를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렸으면 좋겠고, 시장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조 원 이하 요건을 재검토 해보
시면 좋을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결합·활용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

○ (위원) 샘플링 결합절차를 도입하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문제
는 전혀 없어지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여기에 도입했기에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없어지는 것인지?

○ (보고자) 샘플링 결합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동일한 Logic으로 결합키를 생성
하고 그 결합키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주면 데이터전문기관이
그 결합키를 샘플링 해서 되돌려주고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샘플링이 된 결합키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시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이 그 정보를 결
합함.

○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결합키를 주고 결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결합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샘플링된 데이터를 주
고 양쪽이 그 결합키를 일치시키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기존에는 데이터 결합을 하고자 하는 기관 간에 서로 샘플링된 데이터만 추출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경우에는 결합키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결합키를 통해서 역으로 개인정보를 식별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대신에 데이터전문기관은 그 결합키를 받더라도 개인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합키를 받아 그중 일부를 샘플링해서 다시 데이터 결합하고자 하는 기관에 돌려주면 샘플링된 결합키에 해당하는 정보만 데이터결합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다시 보내서 그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는 것임.
- (위원) 결합키를 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Logic이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3호 『데이터기반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주) 등 2개사의 신용정보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데이터기반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주) 등 2개사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본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4호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3개사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SK텔레콤(주) 등 3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본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5호 『(전북)삼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북)삼호저축은행의 임직원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삼호저축은행에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여신부장을 면직하며, 담당직원에게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금산법상 저축은행의 경우에 사외이사와 감사 둘 다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 즉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데, 이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6호 『(경기)제이티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경기)제이티저축은행의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및 구매액을 초과한 할부금융 취급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경기)제이티저축은행에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경기)제이티저축은행이 할부금융자금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반금액 대비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음. 법정 부과한도액이 3,000만 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인데, 매도인에게 직접 할부금융을 주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이었을 텐데 이것은 다행히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금액이 578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음.

- (보고자) 위원님께서 지난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음. 위원님 말씀대로 차주한테 직접 할부금융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적발이 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과징금 상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유사사례나 위반행위가 더 없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협의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7호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22.7.1일 발표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의 하나로서,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8호 『(주)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카카오뱅크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직원(6명)과 퇴직자(2명)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으로 각각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9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식회사 (주)신한은행에 대하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9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를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설명을 위한 자료 일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본건 조치대상 펀드들 이후 판매된 동일유형의 펀드들의 경우 상품제안서와 함께 집합투자규약이 PB들에게 제공되어 위반으로 지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지적대상 전체 건에 대해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1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2분 폐회)